

보도설명자료

(‘12. 8. 8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大停電 돈 주며 막는 중...벌써 2,400억’
(‘12. 8. 8,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전력난을 막기 위해 수요관리를 실시하여 기업에게 절전보조금으로 2,400억원을 지출하였음(‘12.1~’12.6)
- 절전보조금은 전력 공급능력을 제대로 확보하거나 국민이 전력을 낭비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는 돈으로 공급과 수요관리를 실패하여 비싼 대가를 치른다고 보도

2. 전력 수요관리 제도 관련 입장

- 전력 수요관리는 예비력이 450만kW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, 피크시간대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써 미국,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유사한 제도 도입 운영 중
- 통상 100만kW급 발전소 건설에는 1조 5천억원 이상의 비용과 최소 5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전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요관리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것임
- 전기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수요관리사업은 발전소 건설 대비 경제성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

* 수요관리사업 B/C 8.91 (수요관리사업평가보고서, 전기연구원, ’11.5월)

- 수요관리 참여기업은 피크시간대에 전력사용량을 감축하여 조업 차질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영업이익이 저하되거나,
- 조업시간 이동으로 인해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관리 참여에 따른 피해 보상이 필요

※ 관련 문의

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박성택 과장 (02-2110-4897), 양광석 팀장 (4900)